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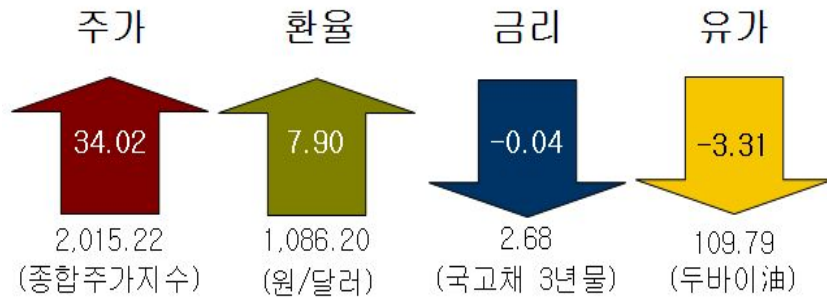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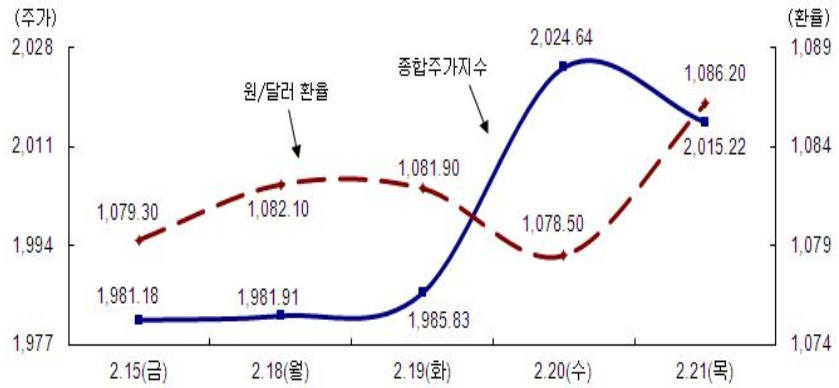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

- 한국 경제의 명(明)과 암(暗)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5~2.2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8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 - 한국 경제의 명과 암

#### ■ 한국 경제의 명(明)과 암(暗)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으나,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우려도 있다. 역대 정부의 긍정적 성과는 계승하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 역대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국가경쟁력)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외환위기 충격을 넘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를 비교해보면,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인프라구축 및 기업효율성 증대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상승하였다. 부패지수도 크게 개선되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때 AA에서 B+까지 떨어졌으나 현재 A+까지 회복되었다.

(경제성장)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년간 약 2.9배 증가하였으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가파르다.

(고용/물가)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급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면서 신규취업자수 증가폭도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물가는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소득분배/삶의 질)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커지고 있으며, 지니계수도 하락하는 추세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이나,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는 정책효과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 OECD 평균 정책효과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 ■ 시사점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소득분배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 제고 및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중산층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원칙 하에 복지공약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명(明)과 암(暗)

-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명(明)과 암(暗)이 교차
  -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으나,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우려점도 존재
  - 역대 정부의 긍정적 성과는 계승하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역대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총평)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 활력과 소득분배는 악화
  - 국가경쟁력 :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승하고 부패지수도 개선되는 추세
  - 경제성장 : 수출은 양호하나 내수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1인당소득은 2만달러 도달
  - 고용/물가 :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으나 물가는 안정
  - 소득분배/삶의질 :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 악화
  - 재정건전성 :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이나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평가분야	평가항목	김영삼정부 ('93~'97)	김대중정부 ('98~'02)	노무현정부 ('03~'07)	이명박정부 ('08~'12)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순위(위)	29	32	32	25
	부패지수(p)*	4.5	4.1	4.8	5.4
	국가신용등급(S&P)**	AA/B+	A-	A	A+
경제성장	실질GDP(%)	7.4	4.8	4.3	2.9
	1인당국민소득(\$)**	11,505	12,100	21,632	22,489
	경상수지(억\$)	-79.4	+195.8	+204.7	+269.4
	잠재성장률(%)	6.8	5.2	4.3	3.6
고용/물가	15~64세 고용률(%)	63.1	61.1	63.6	63.6
	청년고용률(%)	45.7	42.8	44.1	40.6
	소비자물가(%)	5.0	3.5	2.9	3.3
소득분배/삶의질	중산층비중(%)	75.1	70.2	69.3	67.1
	빈곤층비중(%)	7.8	10.3	11.7	12.6
	지니계수(p)	0.251	0.279	0.281	0.292
재정건전성	국가채무/GDP(%)	10.2	17.6	27.3	32.4

주1)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

주2) 국가신용등급 및 1인당국민소득은 정부별 마지막 연도 기준. 나머지는 재임기간 평균

시사점

-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

## 1. 한국 경제의 명(明)과 암(暗)

### ○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명(明)과 암(暗)이 교차

-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
- 김영삼 정부(1993~1997년)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1998~2002년)는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하며 한국 경제를 정상 궤도로 환원
-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초기에는 카드사태를,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 하지만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우려점도 존재

### ○ 역대 정부의 긍정적인 성과는 계승하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역대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明과 暗을 살펴보고, 새정부가 취임 원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
- 평가 분야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 고용/물가, 소득분배/삶의질, 재정건전성 분야며, 평가 대상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4개 정부로 설정

#### < 평가 분야 및 항목 >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국가경쟁력	IMD 국가경쟁력 순위, 부패지수, 국가신용등급
경제성장	실질GDP, 1인당 국민소득, 경상수지, 잠재성장률
고용/물가	고용률, 신규취업자수, 소비자물가
소득분배/삶의질	중산층 및 저소득층 비중, 지니계수
재정건전성	GDP 대비 정부부채

## 2. 역대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

### ①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승하고 부패지수가 개선되는 추세

- (국가경쟁력) 계속되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소폭 개선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김영삼 정부 29위(5년 평균)에서 외환 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32위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25위로 상승
  - 국가신용등급(S&P 기준)도 1997년 외환위기 때 AA에서 B+까지 떨어졌으나 현재 A+까지 회복
- IMD 국가경쟁력 지표 중 경제성과 순위는 크게 하락하였으나, 인프라구축 순위와 기업효율성 순위가 상승
  - GDP, 고용, 물가, 국제무역 등으로 구성된 경제성과 순위는 김영삼 정부 8위에서 김대중 정부 29위, 노무현 정부 43위, 이명박 정부 33위로 급락
  -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건강·환경, 교육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 구축 순위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34위, 28위, 24위, 20위로 상승
  - 기업효율성 순위는 노무현 정부 36위에서 이명박 정부 29위로 상승하였고, 정부효율성 순위는 역대 정부별로 각각 30위, 30위, 35위, 29위를 기록
- (부패지수) OECD 평균보다 부패 정도가 심하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sup>1)</sup>가 이명박 정부 4.5에서 김대중 정부 4.1로 악화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4.8, 이명박 정부 5.4로 개선되어 OECD 국가와의 격차가 축소

#### < 역대 정부별 국가경쟁력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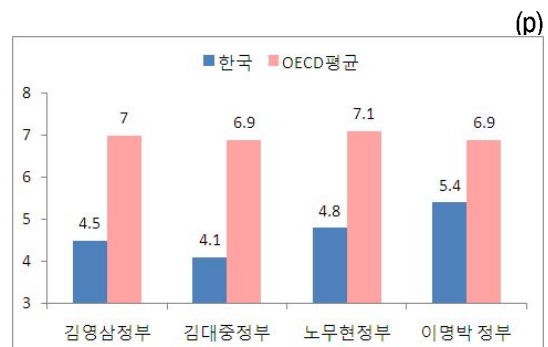
(5년 평균 순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종합	29	32	32	25
경제성과	8	29	43	33
정부효율성	30	30	35	29
기업효율성	-	-	36	29
인프라구축	34	28	24	20

자료 : IMD

주 : 기업효율성 측정 지표가 2000년부터 변경

#### < 역대 정부별 부패지수 >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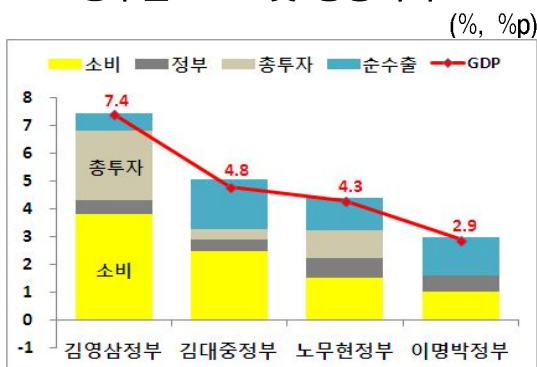
주1 :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

1)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임

② 수출은 양호하나 내수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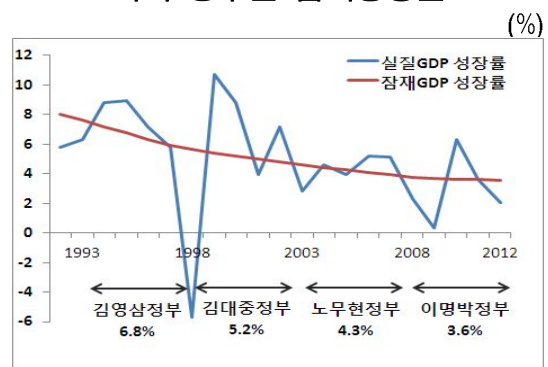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연평균 GDP 증가율이 김영삼 정부 때 7.4%에 달했으나,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로 가파르게 하락
  -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8%, 1.7%, 8.9%, 4.2%임
- 수출은 양호하나, 투자나 민간소비 등 내수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김영삼 정부 0.6%p에서 김대중 정부 1.8%p, 노무현 정부 1.1%p, 이명박 정부 1.4%p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 총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김영삼 정부 2.5%p에서 이명박 정부 0.0%p로 급락
  -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김영삼 정부 3.8%p에서 김대중 정부 2.5%p, 노무현 정부 1.5%p, 이명박 정부 1.0%p로 지속적으로 하락
- (경상수지)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
  - 연평균 경상수지가 김영삼 정부 79.4억 달러 적자에서 김대중 정부 195.8억 달러 흑자, 노무현 정부 204.7억 달러 흑자, 이명박 정부 269.4억 달러 흑자로 크게 개선
-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20년간 약 2.9배 증가 (연평균 5.5%)
  - 1992년 7,714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김영삼 정부 말 11,505달러(1997년)로 연평균 8.3% 증가
  - 김대중 정부 때는 연평균 1.0%씩(11,505→12,100달러), 노무현 정부 때는 12.3%씩(12,100→21,632달러), 이명박 정부 때는 1.0%씩(21,632→22,489달러) 증가
- (잠재성장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성장 잠재력도 크게 약화
  - 잠재성장률이 김영삼 정부 6.8%에서 김대중 정부 5.2%,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3.6%로 가파르게 하락

< 정부별 GDP 및 성장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 역대 정부별 잠재성장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단순추세법(H-P필터링)을 이용하여 자체 추정

③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으나 물가는 안정

- (고용률)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급락
  - 15~64세 고용률이 김영삼 정부 63.1%에서 김대중 정부 61.1%, 노무현 정부 63.6%, 이명박 정부 63.6%로 정체
  - 청년층 고용률은 김영삼 정부 45.7%에서 김대중 정부 42.8%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 44.1%로 개선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40.6%로 급락
- (신규취업자수) 한국 경제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면서 신규취업자수 감소
  - 연평균 신규취업자수(15~64세)는 김영삼 정부 시절 44.0만 명에 달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13.3만 명으로 크게 축소
  - 노무현 정부 18.1만 명, 이명박 정부 19.6만 명으로 낮은 수준 지속
- (물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
  - 김영삼 정부 시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에 달했으나, 김대중 정부 3.5%, 노무현 정부 2.9%, 이명박 정부 3.3%로 안정
  - 생활물가 상승률도 각각 6.0%, 4.9%, 3.9%, 3.3%로 점차 하락 안정

< 정부별 고용률·신규취업자수 >



자료 : 통계청  
 주 : 고용률 및 신규취업자수는 연평균임

< 역대 정부별 물가상승률 >

	역대 정부별 물가상승률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소비자물가	5.0	3.5	2.9	3.3
근원물가	4.7	2.9	2.5	2.9
생활물가	6.0	4.9	3.9	3.3
생산자물가	3.2	2.2	2.5	3.9
수출물가	1.7	-1.2	-2.7	3.0
수입물가	4.6	3.3	4.0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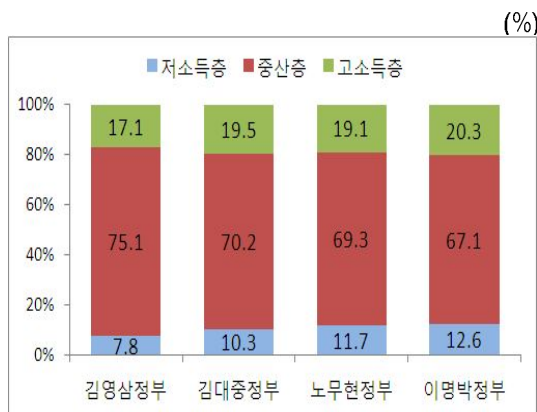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④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 악화

- 역대 정부 때마다 중산층 비중이 하락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 지속
  - 중산층 비중(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이 김영삼 정부 때에는 75.1%에서, 김대중 정부 70.2%, 노무현 정부 69.3%, 이명박 정부 67.1%로 하락
  -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김영삼 정부 7.8%에서 김대중 정부 10.3%, 노무현 정부 11.7%, 이명박 정부 12.6%로 지속적으로 상승
  -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각각 0.251, 0.279, 0.281, 0.292로 악화
- 적자가구 비중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등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크게 악화
  - 소득1분위 중 적자가구 비중은 김영삼 정부 36.1%에서 이명박 정부 56.8%로, 소득2분위는 15.4%에서 31.3%로 급등
- 삶의 질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체감 중산층 비중은 50%에 머물고 체감 저소득층 비중은 40%를 상회
  - 본인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3년 56.2%에서 2011년 52.8%로 줄어든 반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기간 42.4%에서 45.3%로 증가 (통계청 사회조사)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46.4%,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50.1%로 나타남2)

< 역대 정부별 중산층 비중 >



자료 : 통계청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주2 : 이명박 정부는 2008~2011년 평균

< 역대 정부별 적자가구 비중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체	16.6	25.0	25.7	26.4
1분위	35.1	53.8	58.1	56.8
2분위	15.4	27.5	29.7	31.3
3분위	12.3	19.5	19.3	19.9
4분위	10.8	14.3	12.8	14.8
5분위	9.5	9.9	8.7	9.2

자료 : 통계청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2012.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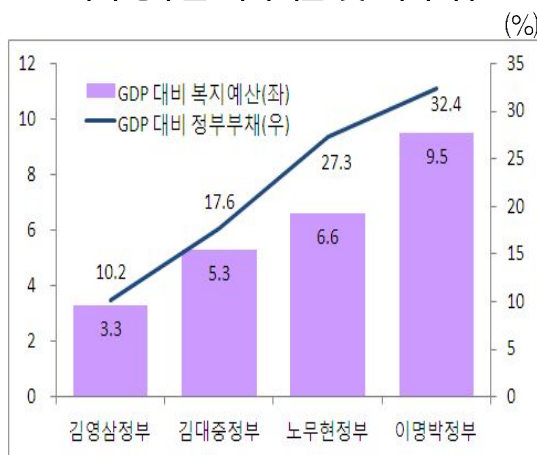
⑤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이나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역대 정부 때마다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김영삼 정부 때는 3.3%에 불과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6.6%, 이명박 정부 9.5%로 상승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김영삼 정부 10.2%, 김대중 정부 17.6%, 노무현 정부 27.3%, 이명박 정부 32.4%로 가파르게 상승
- 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OECD 평균 정책효과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
  - 통상적으로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과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의 격차를 정부정책 효과로 봄
  - 정부정책 효과가 김영삼 정부 1.5%p에서 김대중 정부 2.1%p, 노무현 정부 2.9%p, 이명박 정부 3.9%p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sup>3)</sup>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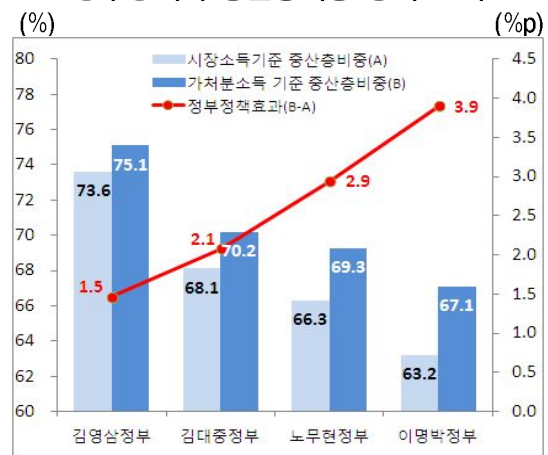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 역대 정부별 복지예산 및 국가채무 >



자료 : 통계청  
 주 : 이명박 정부는 2008~2010년 평균

< 정부정책의 중산층비중 증가 효과 >



자료 : 통계청  
 주 : 정부정책효과 = 시장소득기준 중산층비중 - 가처분소득기준 중산층비중으로 산출

3) OECD는 중산층 비중이 아닌 저소득층 비중(중위소득의 50% 미만)을 공개하고 있음. 2000년대 후반 정부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감소 효과는 OECD 평균 15.2%p에 달함(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 비중 26.3% - 가처분소득 기준 저소득층 비중 11.1%)

### 3. 시사점

-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소득분배 및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
  - 잠재성장률 제고 및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
    -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 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 특단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얼어붙은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실제GDP를 잠재GDP 수준으로 회복
  - 중산층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중산층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는 만큼, 취임 초기에 중산층 70% 재건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5년간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 국가경제 운용의 기본틀을 '일자리 창출'로 명확히 하고, 예산과 조세, 조달, 산업, 금융정책 등을 고용 친화적으로 운영
    -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고, '중산층 영향평가제' 신규도입 검토
  -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원칙 하에 복지공약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법 강구
    - 복지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원조달 정도에 맞춰 복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 필요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6	1.9	6.0	-1.0	-3.8	-0.4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15일	2월 2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02	1.98	-0.04%p
	엔/달러	77.66	79.37	85.86	92.89	93.68	0.79¥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360	1.3286	-0.007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3,982	13,881	-101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1,174	11,309	13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2	2.68	-0.04%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78.3	1,086.2	7.9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81.2	2,015.2	34.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15일	2월 2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5.88	92.78	-3.10\$
	Dubai	104.89	92.89	107.99	113.10	109.79	-3.31\$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8.45	293.13	-5.3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5.6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6.4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